
정책참고자료

2019-17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행정안전부

임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도입, 본격 추진한다	4
- 9월 18일까지 원스톱 서비스 명칭 공모 이벤트 진행 -	

2 국민권익위원회

사고, 질병 등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 보지 못하면 응시료 돌려받는다	9
- 기업재난관리사·수산질병관리사·보세사·가축인공수정사 4개 자격시험에 제도개선 권고 -	

3 중소벤처기업부

경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발표	13
- 소비·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 -	

4 교육부

「OECD 교육지표 2019」결과 발표	21
------------------------------	----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이행방안 확정	28
- 「국가사이버안보전략」 후속으로 기본계획 마련·시행 -	

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분야 성인지 인권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31
- 성불평등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환경 조성 및 중장기 이행안 마련 등 후속 대책 추진 -	

7 농림축산식품부

중소 식품기업들의 공통기술개발, 이제는 정부가 지원합니다.	36
- 중소 식품기업 공통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공고’ -	

8 환경부

모두가 함께하는 자원순환사회..제11회 자원순환의 날 ————— 40

9 고용노동부

청소년 체험지원카드로 한국잡월드 즐겨요! ————— 45

- 9월 9일(월)부터 결제 서비스 제공,
청소년 체험지원카드 사업을 운영 중인 7개 지자체 청소년 대상 -

10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권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 49

- '카카오 페이지'에서 생리대 지원사업 홍보영상 시청 이벤트 진행 -

11 국토교통부

연간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 373명! 횡단보도 앞 일단 멈춤 ————— 54

-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운동
추진으로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먼저인 선진교통문화 확산 -

12 해양수산부

해양영토 주권 강화 위해 해수부-해군-해경 손 잡아 ————— 61

- 9. 10. '범해양기관 협력체제 구축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 -

임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도입, 본격 추진한다

- 9월 18일까지 원스톱 서비스 명칭 공모 이벤트 진행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30일 여러 기관별로 제공하고 있는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신지원 서비스 통합제공 추진계획'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다.
- 정부는 '19년 정부혁신 핵심과제로 국민이 서비스를 찾기 전에 먼저 챙겨주는 '선제적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임산부가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계획을 마련하였다.
- 임신지원 원스톱 서비스는 출산(행복출산*), 사망(안심상속**)에 이어 세 번째로 도입하는 생애주기 서비스로, 국민의 생애주기별로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는 OECD가 선정한 한국의 10대 정부혁신 사례로도 소개된 바 있다.
 - * 출산 후 양육수당 등 출산지원 서비스(전국공통 7종+지자체별 평균 5종)를 한 번에 신청
 - ** 사망신고 후 금융·토지 등 사망자의 재산(11종)을 상속인이 통합 조회
- 그동안 임산부들은 임신 진단 후 국가와 거주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직접 알아보고, 각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 엽산·철분제 등 전국공통서비스 14종 + 산모교실·유축기대여 등 지자체 서비스 3~4종
- 실제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가 정부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모름(36.8%)'을 꼽았다.
 - * (기간/대상) '19.3.18.~3.29. / 정부24 이용자(온라인) 및 송파구 보건소 이용자(오프라인) (분석) 참여자(4,957명) 중 임신 준비중이거나, 임신경험이 있는 3,173명의 응답 분석
- 또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신청하기 위해

직접 보건소 등을 방문하여 동일한 내용의 신청서를 여러 번 작성하고
 매번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이에 정부는 임신부가 임신 진단 후 임신지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 우선, 임신부가 임신 진단 후 출산까지 중앙부처와 거주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문자 또는 ‘정부24’ 앱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임신주기별로 사전에 안내한다.
- 또한, 한 번에 신청 가능한 서비스는 온라인(정부24) 및 오프라인(주민센터)에서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한 번의 신청서 작성으로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신청		안내(3개)
일반(6개)	자격 충족 시(5개)	
①표준모자보건수첩, ②엽산제, ③철분제, ④국민행복카드, ⑤KTX, ⑥위기임신 전문상담	⑦진료비 지원(의료급여수급자), ⑧산모신생아 건강관리, ⑨난임부부지원, ⑩에너지바우처, ⑪청소년임산부	⑫고위험 임신부 지원 ⑬출산휴가급여, ⑭장애인임산부 교육

-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도 엽산·철분제 등 현물 수령이나 난임부부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등이 필요한 경우, 택배·온라인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신부가 직접 보건소에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최소화한다.
※ (기존) 엽산·철분제 수령(2~5회), 난임부부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최대 17회)을 위해 보건소 방문→
(개선) 엽산·철분제, 출산지원물품 등 본인 부담 하에 택배 발송, 증명서는 '정부24'에서 출력
- 이를 위해 내년 4월부터 일부 지자체(5개 내외)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통합신청 대상 서비스를 확대하여 '21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 다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지난 7월부터 지원횟수가 17회까지 확대되고 연령 기준이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하여 많은 난임부부가 매번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없이 내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9월 18일까지 '정부24' 블로그와 '광화문 1번가' 누리집에서 임신지원 원스톱 서비스의 명칭 공모 이벤트를 진행한다.
- '행복출산', '안심상속'에 이어 세 번째로 도입할 '임신' 단계의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국민의 참신한 의견을 수렴하여 서비스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서비스 명칭을 정할 예정이다.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는 아이를 가진 임신부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며, "임산부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임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분	서비스 대상	서비스명	소관기관	서비스 신청		비고
				방법	처리기관	
전국 공통	임산부 전체	표준모자보건수첩 배부	보건복지부	방문	보건소	2단계 신청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보건복지부	방문/ 온라인	건강보험공단, 은행 등	1단계 신청
		엽산제 지원	보건복지부	방문	보건소	1단계 신청
		철분제 지원	보건복지부	방문	보건소	1단계 신청
		맘편한 KTX	한국철도공사	방문	KTX역창구	1단계 신청
		위기임신 전문상담 (마더세이프)	보건복지부	온라인	홈페이지	1단계 신청
		출산전후 휴가급여	고용노동부	방문/ 온라인	고용센터	안내
	소득기준 등 충족 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보건복지부	방문	보건소	1단계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보건복지부	방문/ 온라인	보건소	1단계 신청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방문	보건소	안내
		에너지 바우처	산업통상자원부	방문	주민센터	2단계 신청
		(의료급여수급자)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방문	주민센터	2단계 신청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방문/ 온라인	보건소	2단계 신청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보건복지부	방문	교육수행기관	안내
지자체 (예시) -경기 광주	관내 거주 임산부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자체	방문	보건소	
		무료 산전검사	지자체	방문	보건소	
		기형아 검사비 지원	지자체	방문	보건소	
		임산부·영유아 교육 프로그 램	지자체	방문	보건소	
		무료 분만 전 검사	지자체	방문	보건소	

□ **설문조사 개요**

- (기간) '19. 3. 18. ~ 3. 29.(2주간)
- (대상) 정부24 사이트 이용자(온라인) 및 송파구 보건소 이용자(오프라인)
- (방법) 정부24 배너 게시를 통해 설문페이지 진입(온라인)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방문자 대상 서면조사 실시(오프라인)
- (설문내용)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 주요 임신 지원 서비스에 대한 선호순위, 서비스 이용 시 개선방안 등

구분	계	공통문항	임신·출산 관련 문항
문항 수	14	4	10

□ **설문조사 결과**

① **설문조사 응답자**

- (유효 응답자 수) 총 4,957명 응답자(온라인 4,850명, 오프라인 107명) 중 유효 응답자 수는 3,173명

< 설문조사 응답자 수 현황 >

(단위 : 명)

구분	남성	여성				
		자녀계획 없음	임신준비 중	임신 중	출산경험 1회	출산경험 2회 이상
응답자 수	1,158	626	739	702	903	829
조사대상 아님		설문조사 대상 : 3,173명				

- (연령별 응답자) 유효 응답자 3,173명 중 30대가 69.3%로 가장 많음

< 연령별 응답자 수 현황 >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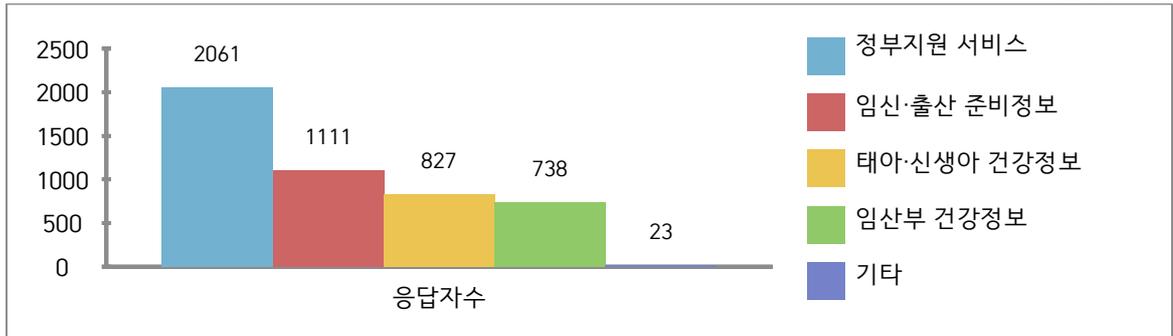
구분	20세 미만	20세~29세	30세~39세	40세~49세	50세 이상	미응답	합계
응답자 수	4	397	2,199	455	110	8	3,173
비율	0.13	12.51	69.30	14.34	3.47	0.25	100

② 임신·출산 준비 시 가장 부족한 정보

- 임신·출산 준비 시 정부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2천여 명으로 가장 많음

< 임신·출산 준비 시 가장 부족한 정보(중복응답) >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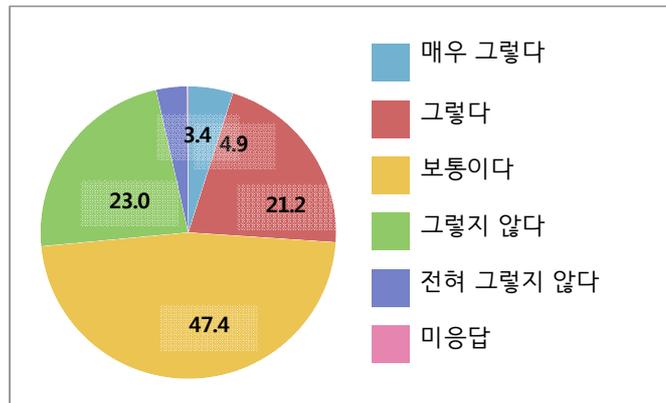


③ 임신 관련 정부지원 서비스 인지도 및 인지경로

- (인지도) 정부지원 서비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787명) 수준

< 임신 관련 정부지원 서비스 인지도 >

(단위 : %)



- (인지경로) 블로그·카페 등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부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우가 가장 많음

< 임신 관련 정부지원 서비스 인지경로(중복응답) >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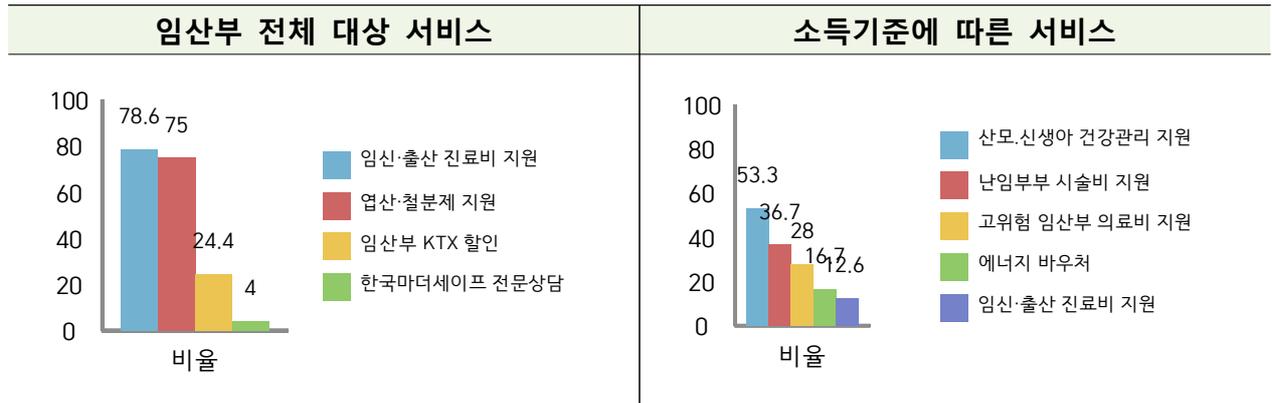


- (개별 서비스 인지도) 전체 대상 서비스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

민행복카드'이, 소득기준에 따른 서비스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개별 서비스 인지도 현황 >

(단위 : %)



- (불편사항) 임신 관련 정부지원 서비스 이용 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몰라 불편하다고 응답한 사람(1,167명)이 가장 많음

< 임신 관련 정부지원 서비스 이용 시 불편한 점 >

(단위 : 명, 중복응답 허용)



⑤ 임신지원 서비스 통합안내·신청 필요성

- 대다수(89%)가 임신지원 서비스 통합 안내·신청이 필요하다고 응답

< 임신 관련 정부지원 서비스 통합안내·신청 필요성 >



사고, 질병 등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 보지 못하면 응시료 돌려받는다

- 기업재난관리사·수산질병관리사·보세사·가축인공수정사 4개 자격시험에 제도개선 권고 -

- 앞으로는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생들이 사고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을 보지 못할 경우 응시료를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일부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생이 본인의 사고·질병에 따른 입원 또는 직계가족의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응시료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국가전문 자격시험 응시료 환불사유 확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농촌진흥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제도개선 권고 대상 시험은 기업재난관리사(행정안전부), 수산질병관리사(해양수산부), 보세사(관세청), 가축인공수정사(농촌진흥청)로 4개이다.

- 국가전문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개별법에 따라 부여되는데 시험합격, 양성과정 이수 등을 통해 전문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응시생은 시험접수를 할 때 응시료를 시험 시행기관에 납부한다.

그러나 국가전문 자격시험 중 기업재난관리사 등 4개 시험의 경우,

시험접수 취소기간이 지난 후 본인의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했을 때에 대한 응시료 환불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환불을 받지 못하는 수험생들의 불만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시험 응시료 및 환불 규정 내용>

자격명	응시료		시험접수 취소기간 경과 후 환불규정
	실 무 분 야	50,000원	
기업재난관리사	계획수립대행분야	70,000원	없음
	인증평가분야	100,000원	
	20,000원		
수산질병관리사	20,000원		없음
보세사	60,000원		없음
가축인공수정사	6,000원		없음

-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업재난관리사 · 수산질병관리사 · 보세사 · 가축인공수정사의 시험접수 취소기간이 지난 후, 응시생 본인의 사고·질병에 따른 입원 또는 직계가족의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시험 응시료 환불이 가능하도록 내년 1월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가 전문 자격시험의 시험 응시료 환불사유가 확대돼 해당 시험 응시생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발표

- 소비·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 -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9.10(화) 07:30,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 당·정 협의 개요 >

- 일시·장소 : '19.9.10(화) 07:30~08:30, 국회 의원회관 306호 정책위회의실
- 참석자
 - (당)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홍의락 제4정조위원장, 홍익표 행안위 간사, 이훈 상임부의장, 산자중기위원(권칠승·박범계·백재현·송갑석·어기구·우원식·위성곤·최인호), 김성환 당대표비서실장, 맹성규 원내정책부대표 등 * 잠정
 - (정)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관계부처(기재부, 행안부, 고용부, 산업부, 공정위) 차관(급) 등

- 이번 대책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와 함께 골목상권 활력 제고,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 추진에 중점을 두었다.
- 지난 12월 종합대책이 소상공인의 성장·혁신을 지원하는 중장기 로드맵이었다면, 금번 대책은 소상공인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급변하는데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에서 마련된 것이다.
- 최근 온라인 쇼핑의 증가,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등에 따른 소비·유통트렌드 변화가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온라인 쇼핑(모바일 포함) 거래액은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하고, 특히 모바일 쇼핑의 경우 4배 이상 증가하였다.

- 또한 AI, VR·AR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은 이미 생활 속에 스며 들고 있고, 이를 서비스·마케팅에 접목한 가게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 온라인 쇼핑(조원) : ('14) 45.3 → ('18) 113.7 / 모바일 쇼핑(조원) : ('14) 14.9 → ('18) 69.1

□ 이러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관련 정보나 대응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이 환경변화에 원활히 적응하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 (우수제품 발굴·진단·선정 시스템 구축, '19.10) 전문가가 제품을 발굴 하여 온라인 역량과 상품성을 진단,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
 - 온라인 활용 역량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해 전담셀러 매칭('20. 2,000명), 상품성 개선('20. 400개사) 및 교육·컨설팅(연 5,000명) 지원
 - 역량과 상품성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는 채널별 MD가 오디션 방식으로 선정한 제품을 해당 온라인 채널에 입점 지원
- (온라인 진출 기반) 소상공인이 직접 또는 1인 크리에이터와 협업 하여 제품을 홍보·판매할 수 있는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19.11)

- 1인 크리에이터 등 소상공인 제품 홍보인력을 교육('20. 500명)하고, 스튜디오와 교육장 시설이 있는 종합지원시설(2곳)을 구축
- 전통시장, 지역축제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1인 크리에이터 오픈 스튜디오를 운영하여 홍보, 특판전 진행('19.9월·11월 시범운영)
- (채널별 지원) V-커머스·TV홈쇼핑·T-커머스·온라인쇼핑몰 입점비용 및 콘텐츠 제작 지원(총 2,800개사), O2O 플랫폼 검색광고 지원(연 1만개사)
- (해외 진출) 글로벌 쇼핑몰 입점 및 홍보·판매를 지원하고('20. 400개사), 아리랑 TV를 통해 전 세계로 송출
 - 글로벌 쇼핑몰 입점상담회('20. 1,200개사), MAMA 행사와 연계, 해외 인플루언서를 초청하여 우수 소상공인 제품 소개·매칭('20. 4회)
- (온라인 공정거래 환경 조성) 온라인 감시팀(공정위)을 구성하여 불공정 계약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인터넷 쇼핑몰의 판촉비용 전가 사례를 방지를 위한 심사지침 시행('20.1)

② '스마트상점' 보급 등 스마트화를 지원한다.

- 스마트상점 사업*을 신설하여 IoT, VR·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하여 보급('20. 1,100개)

* 스마트오더, 스마트미러, 스마트맵 등

- 서비스 혁신이 가능한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개발 추진을 위해 스마트 R&D 및 서비스 혁신 사업 신설
- 소공인의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도입 소공인에 대한 성장촉진자금을 신설('20. 1,000억원)하고 소공인 전용사업(판로지원 및 기술가치향상 R&D 등) 우선 지원
-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 디지털기술을 접목하여 스마트화를 지원('20. 20개사)하고, 소공인특화센터를 통해 IoT·3D 스캔 등 스마트기술 활용 교육('20. 300명)을 실시

③ 명문소공인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한다.

- '명문소공인 제도*'를 도입('20. 300개)하여 소공인이 보유한 보존 가치 있는 숙련기술 계승을 지원

* 장인정신을 갖고 15년 이상 경영하거나, 보존가치가 있는 근간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소공인

- '성장촉진자금'·'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소공인 전용 판로지원사업과 R&D에도 우선 지원

- 소공인 양성 교육기관을 지정('20. 2곳)하고, 교육훈련('20. 100명)을 통해 사장위기에 처한 숙련기술이 계승되는 기반을 마련
- '백년가게' 지정 확대('19. 300개 → '22. 1,000개)를 통해 오랜 경험(30년) 및 노하우를 가진 소상공인을 성공모델로 확산
- 지자체 홈페이지, KTX 매거진, O2O 플랫폼에 지역별 유망업체로 등록하고, 한국관광공사·코트라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홍보 지원
- 소공인간 협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연구회 결성을 지원('20. 20개 연구회, 연간 3천만원)하고 협력클러스터를 구축
- 소공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소공인 간 일감 확보 및 협업을 촉진할 수·발주 시스템 구축('20)
- * 발주기업 및 수주 소공인 간 정보를 공유, 소공인은 협업 생산을 통해 대규모 수주 확보 기회
- 성공 공유 협력모델을 도입하여 이미 성공한 CEO가 소상공인에게 성공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체계 구축('20. 50개사)

④ 사람과 모이고 머물고 싶은 상권을 조성한다.

-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을 올해 4.5조원에서 내년 5.5조원(지역사랑상품권 2.3→3조원, 온누리상품권 2.2→2.5조원)으로 확대

- 지역사랑상품권이 목적에 부합토록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온누리 상품권 모바일 발행을 통해 부정유통 예방
- 문화·콘텐츠·디자인이 어우러진 상권 조성을 위해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확대 개편하여 상권별 특성화를 지원(상권당 60~120억원)하고
 - 소규모 골목상권(20개 이상 상점 집적)도 소외되지 않도록 커뮤니티 시설 조성, 골목디자인 개선 등 지원 대상을 올해보다 확대(8→10개 지자체) 추진
 - 로컬크리에이터('20. 신규, 170명)를 통해 지역의 자산을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전환하고 지역의 명소로 육성

※ 예시) 가업(3대)이던 조선소를 복합 문화공간(카페, 카누제작·교육 등)으로 재생하여, 개소 1년만에 연 20만명 이상 방문하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속초)

- 상권 활성화 및 영세상인의 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해 도시재생사업(국토부) 등과 연계하여 상생협력상가 시범 조성('20~. 2곳 내외 추진)
- 전통시장을 관광 자원화 하기 위해, 전통시장 내 볼거리, 즐길거리를 확대하고, 지역 관광지, 축제 등과 연계한 다양한 전통시장 투어상품을 개발('20. 15곳 내외)
 - 전통시장과 관광자원이 연계된 투어('20. 20곳)를 왕홍의 라이브방송, 웨이보 등을 통해 홍보하여 요우커 방문을 유도
-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자율적 상생협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하고,

가맹본부단체 - 가맹점단체 간 소통채널인 “프랜차이즈 상생협의회”
("20) 및 이해증진을 위한 “상생협력 아카데미” 운영("20)

* 상생협약 : 네이버-소상공인연합회("19.5.13), KB국민은행-한국외식업중앙회("19.8.1)

⑤ 5조원 규모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 5조원의 특례보증을 통해 25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추가 자금을 공급하여 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 사업성은 우수하나 낮은 신용등급으로 고금리 대출에 내몰릴 수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저신용 전용자금도 확대("20. 500억원)
- 아울러,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채권에 대해서도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유예가 가능토록하여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경감("20.2)

⑥ 영세소상공인 경영개선 및 재기 지원을 강화한다

- 규제개선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소분포장을 허용하고, 화장품 책임 판매관리자의 집합교육 의무를 완화
- 세제지원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 등 추진

-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와 폐업부담 경감을 위해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기준보수의 50% → 60%) 및 지급기간 확대(90일~180일 → 120일~210일), 재기지원센터 30개소 우선설치('19.10)
- 이와 함께,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확대('18. 136만명 → '20. 170만명)와 함께 비과밀업종 재창업 및 취업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기 지원('20. 3,500명)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능동적으로 환경변화를 극복하여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 “온라인·스마트화 등이 소상공인 경영 현장에 원활히 접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며, 연결을 통해 강해지는 소상공인이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금번 대책을 통해 도입되는 지원정책들을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 현장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OECD 교육지표 2019」 결과 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2019년 9월 10일 11:00(프랑스 기준)에 공개하는 「OECD 교육지표 2019」의 주요 지표를 분석·발표했다.
- 「OECD 교육지표」는 회원국들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사회적 성과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국제 비교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OECD 교육지표 개요

(조사 근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관한 협약('96.12.18., 조약 제1358호)

(조사 대상) 46개국(OECD 회원국 37개국, 비회원국 9개국)

(조사 내용) 학생, 교원, 재정, 교육 참여 및 성과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

(조사 기준연도) 학생·교원('17년~'18년), 재정('16년), 등록금('18년), 교육 참여·성과('17년~'18년)

(참여 기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통계청 등

(결과 공개) OECD 홈페이지(<http://oecd.org>), 12월 중 「OECD 교육지표 2019」 번역본 발간

※ 1) 일부 자료는 반올림한 값으로 부분의 합이 전체와 다를 수 있음

2) \$로 표시된 수치는 미국 달러에 대한 구매력 평가 지수(PPP) 기준

□ 「OECD 교육지표 2019」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습 환경 및 학교 조직

- ◆ 교사 1인당 학생 수 : 초 16.4명, 중 14.0명, 고 13.2명
- ◆ 학급당 학생 수 : 초 23.1명, 중 27.4명

- '17년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4명, 중학교 14.0명, 고등학교 13.2명으로 전년보다 감소했으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OECD 평균보다 높았다.
- '17년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7.4명으로 전년보다 감소했으나, OECD 평균보다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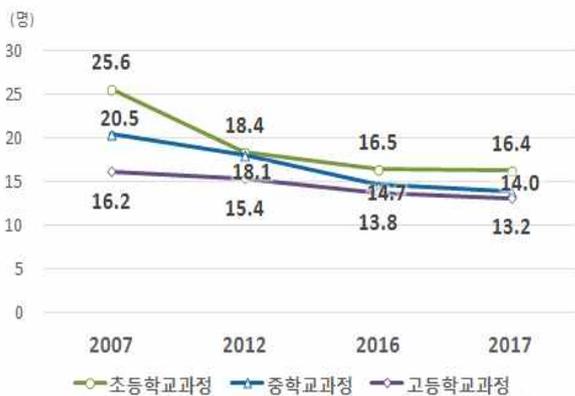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17년 기준)>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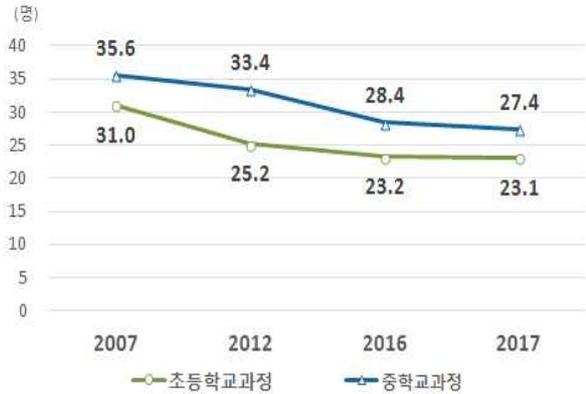
구 분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한 국	16.4	14.0	13.2	23.1	27.4
OECD 평균	15.2	13.3	13.4	21.2	22.9

※ 교사: 기간제 교사 포함 수업교사(주업무가 수업이 아닌 교사 제외, 휴직자 포함)

교사 1인당 학생 수 추이(명)



학급당 학생 수 추이(명)



- '18년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적었고, 15년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많았다.

<국·공립학교 교사의 법정급여('18년 기준)>

(단위 : \$)

구 분	초임 교사 법정 급여			15년차 교사 법정 급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 국	32,485	32,548	31,799	57,179	57,242	56,493
OECD 평균	33,058	34,230	35,859	45,947	47,675	49,804

- '18년 우리나라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 주수는 38주로 OECD 평균과 비슷하고, 법정 수업 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보다 다소 많았다.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 주수 및 법정 수업 일수('18년 기준)>

(단위 : 주, 일)

구 분	연간 수업 주수				연간 법정 수업 일수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	직업계			일반계	직업계
한 국	38	38	38	38	190	190	190	190
OECD 평균	38	38	37	38	183	183	182	185

2. 교육에 투자된 재정

- ◆ GDP 대비 공교육비 : 정부재원 3.8%(0.3%p ↓), 민간재원 1.6%(0.1%p ↓)
-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 초등 \$11,029, 중등 \$12,370, 고등 \$10,486

①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 '16년 우리나라의 초등학교~고등교육(대학) 단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는 5.4%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 GDP 대비 공교육비 = (정부재원+민간재원+해외재원 공교육비) / GDP

<GDP 대비 공교육비('16년 회계연도 기준)>

(단위 : %)

구 분	초등학교~고등학교			고등교육(대학)			초등학교~고등교육		
	정부	민간	합계	정부	민간	합계	정부	민간	합계
	한 국	3.1	0.5	3.7	0.7	1.1	1.7	3.8	1.6
OECD 평균	3.1	0.4	3.5	0.9	0.5	1.5	4.0	0.9	5.0

주 1) 한국의 연도별 GDP : ('15년) 1,564.1조원 → ('16년) 1,641.8조원

2) OECD 지표 구성이 변경되어 정부에서 민간으로의 이전 지출(초등학교~고등학교 GDP 대비 0.03%, 고등교육 GDP 대비 0.29%)을 민간재원으로 포함하는 '최종 자원' 기준 GDP 대비 공교육비 지표만 수록

※ 정부에서 민간으로의 이전 지출(예) : 학생에 대한 장학금, 가계지원금 등

○ '16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중 정부재원은 3.8%로 OECD 평균보다 낮았고, 민간재원은 1.6%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 초등학교~고등학교의 정부재원 비율은 3.1%로 OECD 평균 수준이나, 민간재원 비율은 0.5%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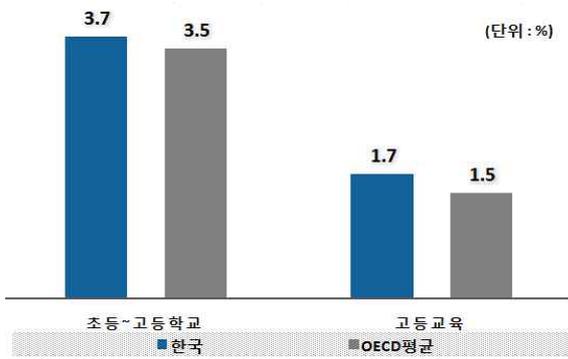
- 고등교육(대학)단계 정부재원 비율은 0.7%로 OECD 평균보다 낮았고, 민간재원 비율은 1.1%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② 공교육비 정부/민간투자의 상대적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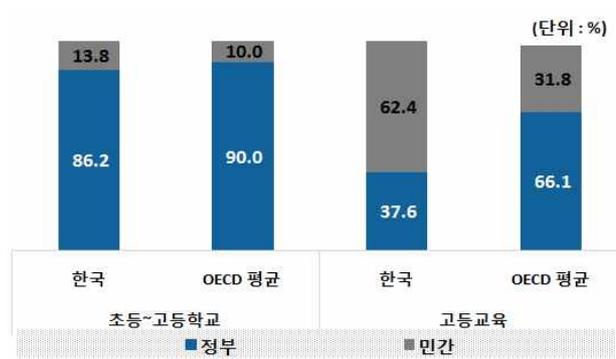
○ '16년 우리나라의 초등학교~고등교육(대학) 공교육비 중 정부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70.5%로, 초등학교~고등학교와 고등교육에서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았다.

* 초등학교~고등학교 : 90.0%, 고등교육(대학) : 66.1%, 초등학교~고등교육(대학) : 82.7%

GDP 대비 공교육비 현황(2016년)



정부/민간투자의 상대적 비율(2016년)



③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 '16년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1,318로 전년보다 \$174 증가했으며, OECD 평균보다 높았다.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 {(교육기관 직접 투자비) / 학생수} / PPP

- 초등교육은 \$11,029, 중등교육은 \$12,370으로 OECD 평균보다 높았으나, 고등교육은 \$10,486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16년 회계연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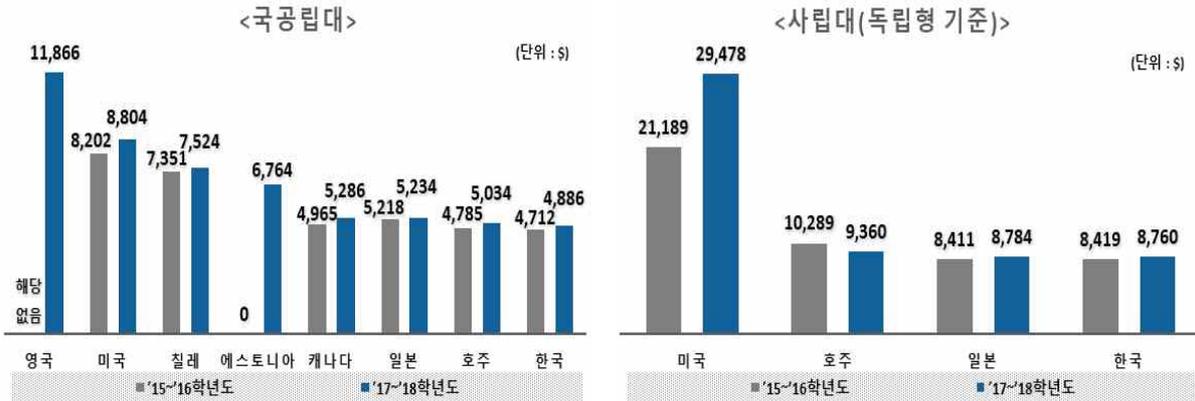
(단위 : \$)

구 분	교육 단계			초등~고등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한 국	11,029	12,370	10,486	11,318
OECD 평균	8,470	9,968	15,556	10,502

④ 대학 등록금(학부 수업료 기준, 2년마다 조사)

- '18학년도 국·공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4,886로 '16학년도 대비 \$174, 사립대학(독립형)은 \$8,760로 \$341 증가하였다.
- 자료 제출 국가 중 우리나라의 등록금은 국·공립대학은 8번째로 높았으며, 사립대학(독립형)은 4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설립유형별/국가별 연평균 등록금



3. 교육에의 접근 · 참여 및 교육기관의 산출 · 성과

- ◆ 만 3~4세 취학률 OECD 평균을 큰 격차로 앞서
- ◆ 청년층(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OECD 국가 중 1위 유지('08년~)

- '17년 우리나라의 연령별 취학률*은 15~19세 87.4%, 20~24세 49.5%로 OECD 평균보다 높으나, 6세~14세 97.4%, 25~29세 8.7%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 연령별 취학률 = 연령별 학생 수 / 연령별 인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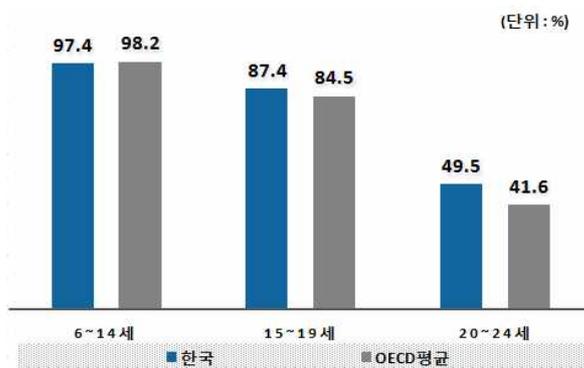
- 만 5세 이하의 취학률은 만 3세 93.7%, 만 4세 97.3%, 만 5세 92.8%이다.

※ OECD 평균 : 만 3세 79.3%, 만 4세 88.1%, 만 5세 9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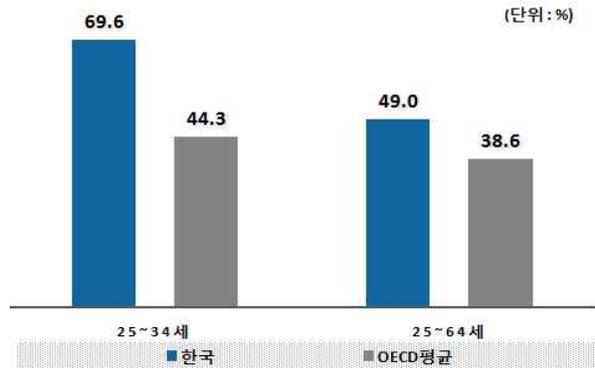
- '18년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49.0%로 OECD 평균보다 높고, 특히 청년층(25~34세)은 69.6%로 '08년 이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 고등교육 이수율 = 고등교육단계의 학력 소지자 수/연령별 인구 수

연령별 취학률 현황(2017년)



고등교육 이수율 현황(2018년)



- '17년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고졸자 임금=100 기준)은 전문대 졸업자 115.2%(0.6%p↓), 대학 졸업자 144.5%(4.4%p↓), 대학원 졸업자 187.9%(10.6%p↓)으로 전년보다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 격차 폭이 줄어들었다.

※ OECD 평균 : 전문대 졸업자 120.2%, 대학 졸업자 144.4%, 대학원 졸업자 191.2%

- '18년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고용률은 74.1%로 전년과 비슷하나 OECD 평균(76.7%)보다 다소 낮고, 교육단계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자 72.4%, 전문대학 졸업자 77.0%, 대학 졸업자 76.7%이다.

※ OECD 평균 : 고교 졸업자 76.1%, 전문대 졸업자 81.6%, 대학 졸업자 84.2%

-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누리집(www.oecd.org)에 탑재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2019년 OECD 교육지표」 번역본을 올해 12월중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http://kess.kedi.re.kr>)에 공개할 계획이다.

국가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이행방안 확정

- 「국가사이버안보전략」 후속으로 기본계획 마련·시행 -

- 정부는 9월 3일(화)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보고·확정했습니다.
 - 본 기본계획은 지난 4월 3일 발표된 「국가사이버안보전략(국가안보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이행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 최근 국제사회의 분쟁요인 급증, 5G 초연결 사회 진전에 따른 위협요인 확대 등 국가 사이버안보에 대한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과기정통부, 국정원, 국방부 등 9개 기관은 정부, 기업 및 개인 모두가 참여하여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본 기본계획에 따라서 정부는 사이버안보 6대 전략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관별 실행계획을 18개 중점과제, 100개의 세부과제로 종합하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사이버안보 전략별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략과제	중점과제	세부 과제수
국가 인프라 안전성 제고	△국가 정보통신망 보안 강화	24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환경 개선 △차세대 보안 인프라 개발	
사이버공격 대응 고도화	△사이버공격 역지력 확보 △대규모 공격 대비태세 강화 △포괄적·능동적 수단 강구 △사이버범죄 대응역량 제고	28
협력 기반 거버넌스 정립	△민·관·군 협력 체계 활성화 △범국가 정보공유체계 구축 및 활성화 △사이버안보 법적기반 강화	16
사이버보안 산업 성장	△사이버보안 투자 확대 △보안 인력·기술 경쟁력 강화 △보안기업 성장환경 조성 △공정경쟁 원칙 확립	14
사이버보안 문화 정착	△사이버보안 인식 제고 및 실천 강화 △기본권과 사이버안보의 균형	9
국제협력 선도	△양·다자간 협력체계 내실화 △국제협력 리더십 확보	9
합 계	18	100

- 첫째, 국가 정보통신망과 주요정보통신시설의 보안환경 개선으로 생존성과 복원력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차세대 보안인프라를 개발·보급하여 국가 핵심 인프라의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
- 둘째,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효율적으로 억지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군 합동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사이버위협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습니다.
- 셋째, 개인·기업·정부 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정보공유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지자체,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센터 등과 협력하는 등 종합적인 사이버안보 거버넌스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넷째, 사이버안보의 핵심역량이 되는 기술, 인력 및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연구개발 활동 등을 통해 혁신적인 보안산업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 다섯째, 국민 모두가 사이버안보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며 정책 수행 과정에서 기본권을 존중받고 국민들의 참여와 신뢰를 보장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 여섯째, 다양한 국제협력을 통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는 등 사이버안보를 위한 국제협력을 내실화하겠습니다.
-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해킹, 정보 절취 등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화 분야 성인지 인권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성불평등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환경 조성 및 중장기 이행안 마련 등 후속 대책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2018년 공연예술, 대중문화, 출판* 분야 종사자 및 창작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문화 분야 성인지 인권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공연예술(연극, 뮤지컬, 무용, 서양음악, 전통예술), 대중문화(방송, 음악, 만화, 패션), 출판계

이 조사는 2018년의 소위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으로 제기된 성희롱·성폭력 등의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제 현장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공연예술, 출판),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대중문화)에 의뢰해 실시한 것이다.

조사 결과, 공연예술, 대중문화, 출판 분야 종사자는 예술인으로서 활동기간 중 분야별로 11%부터 높게는 34%까지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 경험 비율은 55.5%부터 높게는 76.6%까지 나타났다.

※ 일반 직장인 교육 참여 경험: 91%(최근 3년간), 여가부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인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체 종사자 대상 조사)

성불평등한 권력구조 개선과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 필요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은 엄격한 상하관계,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권력구조 등 '위계에 의해 성폭력'과 '성희롱·성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를 주요 성폭력 발생 사유로 지목해 분야별 성평등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심사·자문위원회 구성 시 성별 비율 적용 등 성불평등 권력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공연예술(중복응답): 성희롱·성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80.7%), 엄격한 상하관계(58.4%) 등
- 출판(중복응답): 가해자와 불평등한 관계(63.7%), 성차별적·권위적 조직문화(45.8%) 등

신뢰도 높은 피해자 대응시스템 마련 필요

또한 문제해결 가능성에 대한 불신, 가해자와 같은 관련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 등을 사유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신고상담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마련, 신고 및 보호 지원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 * 공연예술(상위3순위): 문제해결 가능성에 대한 불신(59.0%), 상대방의 권위가 위협적이어서(32.7%) 등
- 출판(우선순위): 가해자와 지속적인 활동(48%), 넘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18%) 등
- 대중문화(중복응답): 문제해결 가능성에 대한 불신(방송12%, 음악15.6%, 만화13.4%, 패션12.4%) 등

안전한 인권환경 표준행동강령 마련 필요, 가해자 처벌 강력 요구

성폭력 피해장소는 공동활동 공간, 회식장소 등*으로 나타났으며, 작업(활동)과 사적인 활동의 경계가 모호해 작업 및 수업이나 연습 중에도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류와 접촉을 분명하게 설정하는 행동강령(지침)의 개발과 확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 공연예술(중복응답): 공동 예술활동 공간(51.2%), 회식장소(50.25), 사적 만남 중(22.1%) 등
출판(중복응답): 회식장소(60.0%), 업무 관련 미팅장소(38.3%), 회사 내 개방된 장소(29.6%) 등
대중문화(중복응답): 술집/식당(방송43%, 음악30%, 만화 31.2%, 패션30.1%), 사무실(패션18.4%),
숙소(7.8%) 등

아울러 모든 분야에서 종사자가 생각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노력의 가장 우선순위는 '가해자 처벌 강화'*로 나타나 앞으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연예술(중복응답): 가해자의 예술활동 공공지원 제한(80.5%), 가해자 공공기관 채용 제한(69.3%) 등
출판(우선순위):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42.0%), 직장 내 성차별 제도나 관행 철폐(13.5%) 등
대중문화(1순위): 가해자 처벌 강화(방송62.9%, 음악47.7%, 만화60.9%, 패션59.6%) 등

▲ 성별화된 권력문화 개선을 위한 법·제도 마련, ▲ 예방교육 확대, ▲ 가해자 제재 강화, ▲ 중장기 이행안(로드맵) 마련 등 후속 대책 추진

문체부는 이번 실태조사와 그간 추진했던 문학·미술·사진 분야(2017), 영화

분야(2017), 스포츠 분야(2018)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문화예술계 특별조사단 운영 결과('18. 3. 8.~6. 19.) 등을 토대로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 문화 분야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의사결정구조 마련 시 성비 균형비율을 적용하는 등 성별화된 권력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 가해자 제재를 위한 고충·심의제도를 운영하며, 가해자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상담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 또한 피해자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분야별 대응지침(매뉴얼)을 확산하고, ▲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야별 신고상담센터*의 사안처리 기능을 강화하는 등 2차 피해를 포함한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 문화 분야 특수성을 고려한 예방교육 콘텐츠와 표준 행동강령을 개발·확산하고 내실 있는 예방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

* 분야별 신고상담센터(1670-5678): 한국콘텐츠진흥원 성평등센터 '보라'(1번),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2번),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3번)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신뢰도 높은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으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중장기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양성평등문화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3개 분야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붙임 분야별 성인지 인권환경 실태조사 추진 개요

구 분	공연예술	출판	대중문화
추진기간	'18. 7.~'19. 5.	'18. 6.~'19. 5.	'18. 7.~'19. 6.
수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사 대상	연극, 뮤지컬, 무용, 서양음악, 전통예술 종사자 3,939명 (여 1,823명, 남 1,840명)	출판 분야 종사자 및 근무경력자 1,020명 (여 378명, 남 639명, 기타 3명)	방송, 음악, 만화, 패션분야 종사자 및 창작자 2,111명 (여 1,302명, 남 807명, 기타 1명)
조사내용	-성폭력 의식 및 인지 -성폭력 목격 및 피해경험 -성폭력 대응실태 및 근절방안 -분야특성 반영한 대응매뉴얼 발간 및 정책 수립 제언	-응답자 업무환경 -성폭력 의식 및 인지 -성폭력 목격 및 피해경험 -성폭력 대응실태 및 관련의견 -출판계 대응매뉴얼 발간 및 정책 수립 제언	-성폭력 의식 및 인지 -성폭력 목격 및 피해경험 -성폭력 대응실태 및 관련의견 -분야특성 반영한 대응매뉴얼 발간 및 정책 수립 제언

* 공통문항: 피해여부, 피해유형, 대응유형, 인식, 예방교육 경험 및 참여채널, 목격여부, 공공서비스 인지 여부, 종사경력 등 14개 문항

○ 조사의 한계 : 조사항목 중 성희롱과 성폭력의 경험에 관한 사항은 응답자의 협조에 좌우됨에 따라 전통적인 표본설계 방식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결과수치에 대한 직접적인 절대 값 비교 보다는 대략의 수준을 파악하는 관점에서 활용되어야 함

- * 본 조사의 내용 중 ‘성희롱과 성폭력의 경험’에 관련된 조사항목은 조사현장에서 응답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특성이 존재하여, 응답자의 협조가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전통적인 표본설계 방식을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 존재
- * 공연예술은 예술인을 조사대상으로, 출판은 1차적으로 출판사업체를 대상으로 표본 선정 후 2차적으로 각 사업체에 속한 종사자를 표본을 선정하였음. 대중문화는 온라인 조사 사이트를 공지 한 후 조사응답 희망자가 조사에 응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응답자를 정하고 조사하는 전통적인 표본추출방식(확률표본설계)과 희망자만 응답하는 비전통적인 표본추출방식(비확률표본설계)를 혼용하여 적용
- * 전통적인 표본설계 방식은 확률표본설계로, 조사대상 모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종단계에서 임의추출(랜덤추출)을 수행한 후 선정된 표본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고, 표본으로부터 산출된 값을 모집단의 값으로 일반화하는 과정을 거침

중소 식품기업들의 공통기술개발, 이제는 정부가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 공통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공고 -

《 주 요 내 용 》

◆ 중소기업 공통기술 연구개발(R&D) 지원 계획

- 목적 : 중소기업들의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및 혁신역량 제고
- 공고기간 : 2019. 9. 5.(목) ~ 2019. 10. 16.(수)
 - * 신청·접수기간 : 2019. 10. 8.(화) ~ 2019. 10. 16.(수) 18:00 까지
- 지원대상 : 주관연구기관(대학,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소)
참여기관(공고일 기준 설립 1년 이상, 식품중소기업)
- 지원내용 : 연구기간 1년 이내, 연구비 1억5천만원 범위내,
12개 내외 과제 지원
 - * 1년내 상용화하여 기술전수가 가능한 기업간 공통 수요 기술개발 지원
단순 메뉴개발, 유통·판매기술, 개별 기업별 제품개발 기술과제 제외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현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들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 식품산업은 다수의 기업이 영세하고 판로·영업망 확보에 치중하여 기술 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이다.

○ 자체 연구소 보유 기업 비율은 0.6%(제조업 5.9%)에 불과하여 영세한

중소 식품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에 여러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통 기술 수요를 발굴하고, 전문역량을 갖춘 연구기관에서 기술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 식품기업 공통기술 연구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 「중소 식품기업 공통기술 연구개발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종전 연구개발(R&D) 지원 사업과 다른 특징이 있다.

- 먼저 연구기관(대학, 연구소 등)이 해당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3개 이상)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 공통 기술 : 기업들에 공통으로 필요한 공정개선, 신기술, 공통의 난제기술, 신규 품목 개발기술 등 산업계에 파급효과가 큰 과제로, 개별기업의 단순제품개발 과제는 제외

- 다음으로, 단기간(1년 내) 주관연구기관이 참여기업에게 기술을 이전하고 산업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아울러,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금은 참여한 기업의 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분담하도록 하여 참여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 자세한 공고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 또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www.ipet.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농식품부 남태헌 식품산업정책관은 “그동안 중소 식품기업들 간에 공통으로 필요한 기술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지원이 다소 부족하였다”며,
- “전문역량을 갖춘 연구기관들이 참여 기업들과 협업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참여 기업들에게 기술 전수와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식품 연구개발(R&D) 정부혁신을 통해 중소 식품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19년 식품 중소기업 공통수요 기술개발 지원 계획

- (사업목적) 대학, 출연연 등이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식품 R&D가 시급한 식품 중소기업들의 공통기술 수요를 발굴, 협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기업에 전수하고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식품산업 경쟁력 제고
- (지원규모) '19년 총 18억원(과제당 연구기간 1년, 출연금 1.5억원 이내)
- (지원분야) 단순 메뉴개발, 유통 및 판매기술은 지양, 기업 간 공동 수요에 기반한 제조기술·공정개선 등 현장애로 해결기술 개발 집중 지원
- (공고) '19. 9. 5(목) ~ '19. 10. 16(수), 41일간
- (자격요건) 반드시 대학 또는 연구소가 주관하고 관련 식품분야 중소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 대학, 출연연, 지자체연구소 등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 협동연구기관으로 사업화·현장적용을 수행할 식품 중소기업 3개 이상을 반드시 연구에 참여

- (평가절차) 정책부합성평가, 서면평가, 발표평가 진행



- 연구개발 체계(예시)



모두가 함께하는 자원순환사회...제11회 자원순환의 날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9월 6일 오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제11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 매년 9월 6일인 ‘자원순환의 날’은 ‘폐기물도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의 중요성과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환경부가 2009년부터 지정한 날이다.
 - * 9월 6일: ‘9’와 ‘6’은 서로를 거꾸로 한 숫자로서 순환의 의미를 부여
- 환경부와 인천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올해 기념식은 자원순환사회 구축에 대한 정부,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 등 협치(거버넌스)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하는 자원순환 사회’를 주제로 열린다.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강화와 함께 재활용 산업과 시장을 육성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자원순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 모든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을 강조할 예정이다.

- 아울러, 이날 그간 자원순환 활동에 공로가 큰 기업, 지자체 등에 대한 분야별 시상식도 열린다.
- ‘자원순환 선도 및 성과우수 사업장’ 으로 삼성전자(주)화성사업장과 오뚜기에스에프(주), 코오롱인더스트리(주)울산공장이, ‘순환골재 우수활용기관’ 으로 충청남도 논산시와 대구도시공사가, ‘포장재 및 1회용품 감량 우수기관’ 으로 (주)파리크라상이, ‘생활 및 음식폐기물 감량 우수기관’ 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정부포상의 영예를 안는다.
- 한편, 환경부와 인천광역시, 현대제철과 환경재단 등 10개 기관은 본 행사 전에 자원순환 협치(거버넌스) 사업의 본보기로 ‘커피박(찌꺼기) 재자원화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을 체결하고, 커피박의 배출부터 재자원화 전 과정에 이르는 민·관 협력체계를 완성하기로 했다.
- 협약식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형철 현대제철(주) 부사장,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다.
- 커피소비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커피 찌꺼기는 그간 생활폐기물로 대부분 버려져 왔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구조물(인공목재처럼 데크 및 식생모듈 부품으로 활용)로 재자원화 될 예정이다.
- 공식 기념식 외에도 분리배출 체험교육, 재활용예술(리사이클링아트) 전시, 나눔장터, 재활용품 직접만들기,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체험 행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 이와 함께 송도컨벤시아 그랜드볼룸에서는 인천광역시 자원순환 도시 선언식, 자원순환 이야기공연(토크콘서트), 지역 자원순환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강연 등이 인천광역시 주관으로 진행된다.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자원순환의 날 행사를 통해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산업계·공공기관·국민 모두가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새로운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붙임 1. 제11회 자원순환의 날 행사추진 계획.

2. 커피박 재자원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 계획. 끝.

※ 관련 행사 사진은 환경부 웹하드 게재(9월 6일 16시 30분 게재 예정)

1. 배 경

- ‘자원순환사회’ 전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전 국민에게 확산하기 위해 ’ 09년부터 기념식 개최

2. 행사 개요

- (행 사 명) 제11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
- (주 제) 모두가 함께하는 자원순환 사회
- (일시/장소) ’ 19. 9. 6.(금) 13:30~15:00 / 인천 송도 컨벤시아
- (행사규모) 약 2,500명(환경부, 인천시, 산하기관, 업계, 시민 등)
- (주 최) 환경부·인천시·자원순환의날조직위원회 / 한국폐기물협회
- (주요내용)
 - (식전행사) 자원순환의 날 기념 및 자원순환의 의미 전달과 공유를 위한 공연, 환경단편영화제 수상작 상영
 - (협 약 식) 커피박 재자원화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
 - (공식행사) 정부포상, 기념사, 자원순환 캠페인 등
 - (부대행사) 자원순환 정책 및 우수사례 전시·홍보, 시민 참여 이벤트 등
 - (정부·지자체) 자원순환 주요 정책 추진 성과 등 홍보
 - (생산·유통업계) 1회용품 줄이기 등 주요성과 소개
 - (재활용업계) 우수 재활용제품 전시, 업사이클링 체험 등
 - (시민사회) 분리배출 체험교육, DIY 체험교실, 자원순환 실천서명 등

3. 행사 세부일정 및 구성

구 분	시 간	내 용
식전 행사 (행사장)	13:30~	참가자 도착 및 좌석 착석
	13:45~13:55(10')	식전 문화공연
	13:55~13:58(03')	사회자 행사 안내
	13:58~14:00(02')	주요내빈 입장 및 착석
커피박 재자원화 협약 (206호)	13:35~13:38(03')	협약식 진행 안내 및 소개
	13:38~13:39(01')	MOU 취지 설명
	13:39~13:43(04')	협약식 서명 및 교환
	13:43~13:45(02')	기념촬영 및 폐회
공식 행사 (행사장)	14:00~14:10(10')	개식선언
		국민의례
		주요내빈 소개
	14:10~14:25(15')	정부포상 수여
	14:25~14:35(10')	환영사
		기념사
	14:35~14:50(15')	자원순환 퍼포먼스 및 기념촬영
14:50~	폐식선언 및 내빈 퇴장	
부대 행사 (행사장)	10:00~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각 주체별 역할 및 참여방안 주제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생산·유통업계, 정부·공공기관, 재활용 업계별 홍보·전시 부스 운영 ○ 1회용품 저감활동 홍보,중고물품 나눔장터,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분리배출체험학습, 리사이클링아트 전시, 업사이클링제품 전시, 다 쓴 건전지 교환캠페인 등

청소년 체험지원카드로 한국잡월드 즐겨요!

- 9월 9일(월)부터 결제 서비스 제공,
청소년 체험지원카드 사업을 운영 중인 7개 지자체 청소년 대상 -

- 국내 최대 어린이·청소년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이사장 노경란)가 9월 9일(월)부터 “청소년 체험지원카드” 결제 서비스를 시작한다.
 - “청소년 체험지원카드” (지자체별로 카드명 상이, 붙임 참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중학교 1학년(만 13세 학교 밖 청소년 포함)에게 연간 10~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 강서구, 도봉구, 동작구, 성동구, 성북구와 전라남도 여수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7개로 각 지자체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청소년은 이를 이용해 한국잡월드 이용요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되었다.
 - 다만 지원카드를 이용한 한국잡월드 체험료 결제는 온라인에서만 가능하며 현장 결제 서비스는 지원하지 않는다.
- 한편, 한국잡월드는 이번 결제 서비스를 시작하며 청소년들을 위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 청소년체험관 체험실을 지원카드를 이용해 2개 이상 이용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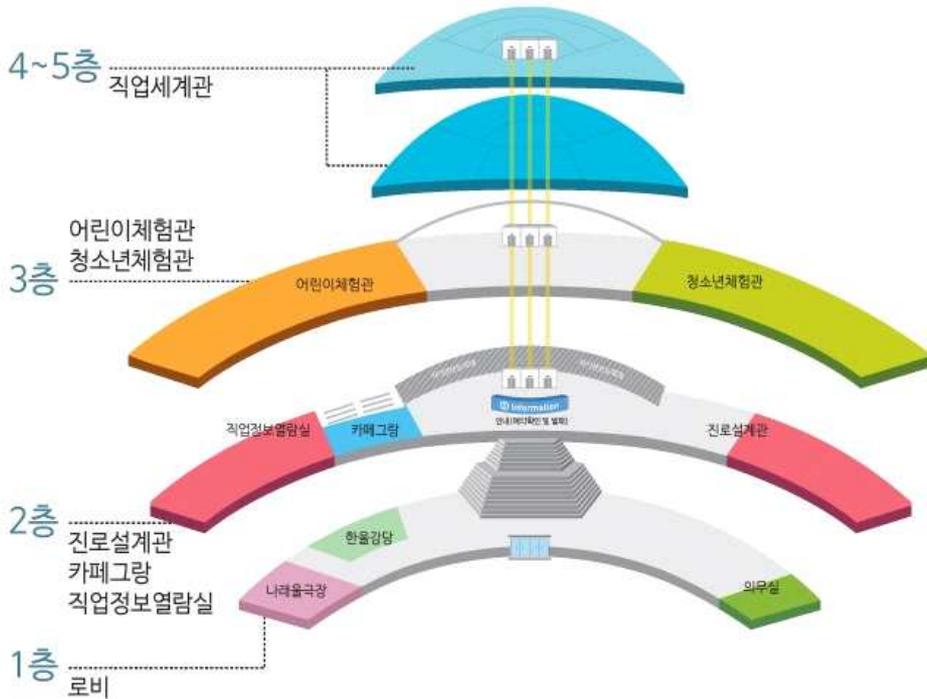
선착순 100명에게 기념품을 선물할 예정이다.

- 한국잡월드 노경란 이사장은 “청소년 체험지원카드 결제 서비스를 통해 직업·진로 체험 장벽이 한층 낮아지게 되었다.” 고 말하며, “한국잡월드는 앞으로도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민 편의 확대 등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 고 의지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명	카드명칭(사업명)	수혜인원(명)
강서구	청소년 꿈in진로체험카드	4,800
도봉구	청소년 미래카드	2,500
동작구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2,670
성동구	성동구 체험학습카드	1,920
성북구	아동 청소년 동행카드	3,300
세종시	세종시 진로체험카드	4,000
여주시	청소년 진로체험 행복카드	2,340
합 계		21,530

청소년 체험지원카드 결제시 유의사항

1. 청소년 체험지원카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포인트로, 결제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됩니다.
2. 청소년체험지원카드 → 카드포인트 잔액조회 → 결제진행
3. 결제금액보다 포인트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4. 예약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 후 다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예약을 취소할 경우 한국잡월드의 환불규정에 따라 포인트가 전액 환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포인트 사용 마감일 (매년12월 중순경) 이후에는 예약분을 취소하더라도 포인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권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 ‘카카오 페이지’ 에서 생리대 지원사업 홍보영상 시청 이벤트 진행 -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만11세~만18세)들이 개인 선호 제품을 직접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생리대 구매권을 지원(‘19.1.2.~)하고 있다.
 - 보다 많은 청소년에게 생리대 지원 사업을 적극 알리기 위해 ‘카카오페이지’ 를 활용한 홍보 이벤트를 9월 11일(수)부터 10월 10일(목)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 ※ ‘카카오페이지’를 통해 김이중 배우의 재능기부로 제작된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홍보 영상을 시청하면, 사이트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100캐쉬) 부여
- 이전에는 생리대를 현물로만 지원하여, 청소년 개인이 선호하는 생리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웠으며, 반드시 보건소·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이에 여성가족부는 서비스 방식을 개선하여, 올해부터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한 구매권(바우처)을 국민행복카드에 담아 지원하고 있다.
- 생리대 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부모 등 주양육자)가 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만11세에서 만18세(2001.1.1.부터 2008.12.31.까지 출생자(2019년 기준)) 여성청소년이다.

○ 한번만 신청하면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만 18세가 도달하는 해당년도 말까지 지원된다.

- 단, 신청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

○ 지원 금액은 월 10,500원 기준으로, 연 2회(상·하반기) 나누어 지원하며, 해당 이용권(바우처)은 연도 내에 사용하면 된다.

□ 서비스 신청 후 구매권 이용을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국가통합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카드사별 온·오프라인 가맹 유통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 여성가족부는 지원대상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제품을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사용 가능한 구매처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 특히,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농협하나로마트를 구매처로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 연내 가능하도록 현재 추진방안을 마련 중이다.

□ 박난숙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구매권을 지원 받은 여성청소년들이 연말까지 시기를 놓치지 않고 꼭 사용하기를 바라며,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서비스 이용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 좀 더 세심히 들여다보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2019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2. 2019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개요



여성청소년 생리대, 한 번 신청하고 계속 지원받으세요!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

- **만 11세 ~ 만 18세 여성청소년**
 (만 18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 및 제 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 126,000원(월10,500원) 지원,**
국민행복카드로 구매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앱에서 신청
www.bokjiro.go.kr

문의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사회보장정보원(1566-3232)

배우 / **김아중**

'이 포스터는 배우 김아중 님의 재능기부로 제작되었습니다'

□ 신청 개요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대상에 해당되는 2001.1.1. ~ 2008.12.31. 사이에 출생한 여성청소년 (2019년 기준)
- 지원기간 : 만 18세에 도달하는 해당년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 (최대 8년)
- 신청기간 : 2019년 1월부터 12월 15일까지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모바일 앱 신청

<방문신청>

- 신청인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등 주 양육자
- 구비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부모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장소 : 청소년의 주소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 신청인 : 청소년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 단, 신청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방법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및 앱 이용

☞ 사업명 검색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 지원 내용

- 보건위생물품 구매비용(월 10,500원 산정)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생성
 - * 상, 하반기 2회 씩 나누어서 6개월 분(63,000원)씩 지급됨, 2월에 신청하면 5개월 (2월~ 6월)분 (52,500원)만 지급됨
 - * 포인트는 한 번에 전액 사용하거나 12월 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 수혜자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바우처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 구매

<국민행복카드 별 바우처 사용가능 구매처>

카드	온라인 유통점	오프라인 유통점
BC카드	지마켓, 옥션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CU편의점
삼성카드	삼성카드 쇼핑몰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CU편의점
롯데카드	올마이쇼핑몰	롯데마트, VIC마켓

<국민행복카드 신청문의>

국민행복카드 발급사		문의
BC카드	우체국, NH농협,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 수협은행, SC(제일)은행, 광주은행	1899-4651
삼성카드	신세계·세이 백화점 고객센터 센터 및 삼성카드 홈페이지, 삼성카드App, 전용콜센터	1566-3336
롯데카드	롯데카드 전국영업점 및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홈페이지, 롯데카드App, 전용콜센터	1899-4282

연간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 373명 횡단보도 앞 일단 멈춤

-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운동 추진으로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먼저인 선진교통문화 확산 -

□ 우리나라의 최근 5년('14년 ~ '18년) 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 추세이나, 보행 중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OECD 회원국 평균 19.7%에 비해 약 2배나 높은 39.7%이다.

- 특히, 2018년은 2014년에 비해 보행자 사망사고가 22.1% 감소(1,910명 → 1487명)했으나, 횡단보도 통행 중 보행자 사망사고는 11.3% 감소(388명→344명)하는 데 그쳤다.
-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횡단보도 안에서도 연평균 373명*의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어 보행자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자의 인식개선이 시급하다.

* '14년 388명 → '15년 370명 → '16년 389명 → '17년 374명 → '18년 344명

□ 이에, 정부 합동으로 보행자 사고가 증가*하는 9월부터 연말까지 도로에서 보행자의 권리와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교통문화 운동을 추진한다.

* 월평균 보행사망자 현황: △(1~8월) 121명 △(9~12월) 165명

- 주요 해외 교통 선진국의 보행자 교통문화를 살펴보면, 미국에서

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모든 차량은 반드시 정지하여야 하며, 프랑스·독일·호주 등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횡단하려는 보행자까지 보호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 우리나라도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교차로 우회전 차량 포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많지 않다.

- 전체 보행사망자 중 횡단보도 통행 중 사망하는 보행자의 비율은 2014년에 비해 2018년에 2.8% 증가(20.3%→23.1%)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이번 슬로건은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이며,

- 보행자 중심 선진교통문화의 핵심인 ‘보행자 존중과 배려’는 보행자와 차량의 접촉 가능성이 큰 횡단보도 주변에서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배려 문화가 정착된다면 앞으로 모든 도로까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대국민 홍보를 위해 매월 경찰청·국토부·행안부 등 중앙부처와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손해보험협회,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단체가 참석하는 합동 캠페인을 실시한다.

- 이번 홍보는 전국 지역 경찰관서와 자치단체 등 교통안전 협의체를 중심으로 보행자 사고 다발 장소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캠페인을 할 예정이며, 국민이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로 전

광판, 버스정류장,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등에 홍보 영상과 포스터를 부착할 예정이다.

-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 전환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속보다는 계도에 집중할 예정이나,
 - 횡단보도 일시 정지 위반차량을 발견한다면 영상을 촬영하여 “스마트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으로 공익 신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 경찰이 없는 곳에서도 보행자 배려 문화가 퍼져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 18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공익신고 11,934건(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 또한,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 시’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 까지 확대하고
 - 교통약자가 주로 통행하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한 다음 통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일반 도로	보행자가 <u>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u>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보행자가 <u>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u> 도 운전자 일시정지 (윤후덕 의원, '17. 8. 18. 발의)
보호 구역	명시규정 없음	보호구역내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주승용 의원, '17. 8. 10. 발의)

□ 정부는 이번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교통문화 운동을 통해

- ‘내 이웃이며 가족인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단 멈춘다’ 라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이번 교통문화 개선 운동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뜻한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1. 최근 5년(' 14~' 18년) 간 횡단 중 보행자 사고 현황

2. 홍보 영상, 포스터, 현수막

○ 보행 중 사망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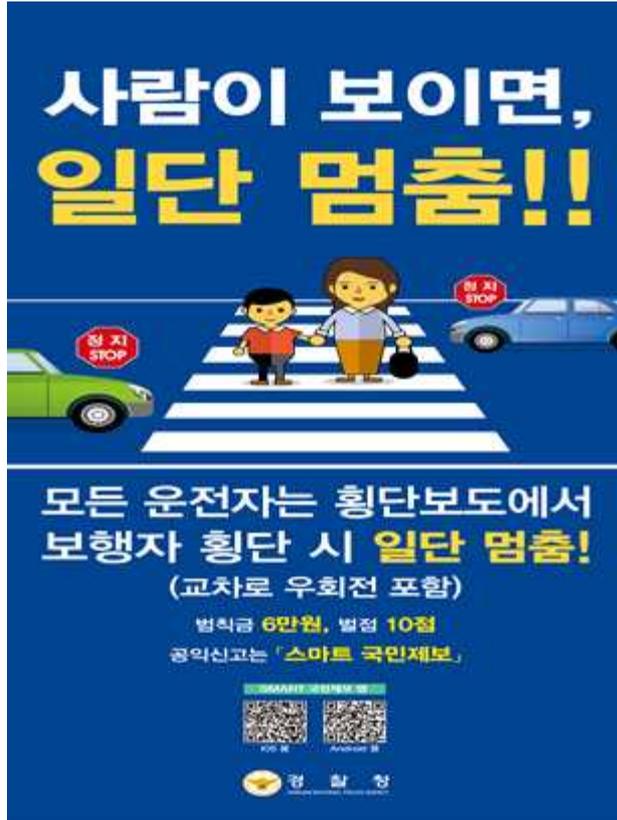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전체 사망자(명)	21,641	4,762	4,621	4,292	4,185	3,781
보행 중 사망자(명)	8,581	1,910	1,795	1,714	1,675	1,487
비 율(%)	39.7	40.1	38.8	39.9	40	39.3

○ 횡단보도 통행 중 사망자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보행 중 전체 (명)	8,581	1,910	1,795	1,714	1,675	1,487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명)	1,865	388	370	389	374	344
비 율 (%)	21.7	20.3	20.6	22.7	22.3	23.1

○ 포스터



○ 현수막



제27조(보행자의 보호)

-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양영토 주권 강화 위해 해수부-해군-해경 손 잡아

- 9. 10. '범해양기관 협력체제 구축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해군(참모총장 심승섭),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9월 10일(화) 해양수산부 5동 대회의실에서 '범해양기관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급변하는 국제 해양질서에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첨단 해양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 공조와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개최된다.

3개 기관은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유사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상시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국가해양관측망 개선과 주변해역 해양과학조사, 무인도서 관리 확대 등을 위해 협력함으로써 해양영토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첨단 해양과학기술의 공동 개발·활용을 통한 스마트 해양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한다. 2021년부터 공동으로 연구개발(R&D)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중장기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신기술 개발을 통해 해양안보·안전체계의 첨단화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현 정부의 핵심 외교정책인 신남방·신북방정책 지원을 위해

해양경제·안보 관련 국제기구에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새로운 경제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 인도 등 신남방국가들과의 협력과 북방경제 진출을 위해 해외 해양항만협력기지 구축 등에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해군, 해경은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되는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국장급으로 구성되는 '정책실무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해군, 해양경찰청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심승섭 해군 참모총장은 “국가해양력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총체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며, 이번 정책협의회가 그런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도 “3개 기관의 단합된 노력이 우리의 해양영토 주권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